

입김 센 민주 권리당원, 통합특별시장 경선구도 흔들나

6·3 지방선거 이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역 권리당원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광주와 전남의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규모는 광주 13만여명, 전남 18만여명 등 31만~32만여명으로 예측된다.

전남 최고위원회에서 경선을 위한 권리당원 규모가 확정 보고됐지만, 아직 구체

30만명 이상 추정...투표 참여율·조직력 변수

여론 흐름도 복합 작용...판세 영향 줄 수도

적 지역별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전당대회 당시 지역 권리당원 규모가 약 22만~24만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수가 많이 늘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예비 후보 8명 중 5명을 추리는 예비 경선은 100% 권리당원 투표로 치러져 당원의 표

심이 결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본경선 또한 당원 50%, 일반 시민 여론 조사 50%가 반영돼 권리당원의 표가 후보의 생존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역 정가는 내다보고 있다.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경선 권리당원 투표율은 선거 경쟁 구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문

재인 정부 초기 높은 지지율과 다자 경쟁이 맞물리며 광주 48.1%, 전남 52.1%(본경선 기준)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2022년 대선 패배 직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광주시장 본경선 투표율이 42.1%로 낮아졌고, 전남지사 선거는 단수 공천으로 당원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전당대회와 대선 경선에서는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율은 51~53% 수준을 기록해 전반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 중이다.

때문에 이번 통합특별시장 경선은 다자 대결, 결선투표, 높은 민주당 지지도 등이

맞물리면서 권리당원 투표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 것으로 점쳐진다.

권리당원 규모도 변수다. 전남이 광주보다 권리당원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남은 동부권과 서남권 등 지역별 지지세가 다르기 때문에 당심이 갈릴 수도 있다.

특정 후보의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에서 투표 참여율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이후 권리당원이 급증한 점도 판세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조직적 당원 가입이 상당 부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후보 개

인 경쟁력뿐 아니라 후보별·지역별 조직 동원력이 실제 권리당원 표심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권리당원 100%로 진행되는 예비경선이 결국 본경선 구도까지 형성하게 될 것이다"며 "결선투표가 이뤄진다면 탈락 후보의 표심 이동이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원 100% 투표라 하더라도 여론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결국 당심과 민심이 복합적으로 경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 농민 지원 확대...특별시 되면 전남 수준 혜택”

김영록, 광주농협조합장협의회 회장단 등 면담 “농업, 지역 기반산업...AI 결합 농업 혁신 지원”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사진)가 광주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후에는 광주 농민들도 전남 농민들과 같은 수준의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11일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농 협조합장 협의회'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광주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장들은 광주 농민들이 대도시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농어인수당 등 일부 농업 지원 정책에서 전남 지역 농민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김영록 광주농협조합장협의회 의장(서청농협조합장)은 “광주 농업인의 수가 2

만5000여명에 달하지만, 대도시라는 이유로 전남 농민들과 같은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광주 외곽 전남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 가운데서도 주소지가 광주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한 조합장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아니라 농지 소유주가 직불금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검사 가능 강화를 위해 농산물검사소에 사법경찰관을 부여해 달라 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예비후보는 “광주와 전남이 통합해 특별시가 출범하면 광주 농민들도 전남 농민들과 같은 정책 혜택을 받도록 제도



를 보완하겠다”며 “특별시 전체 농민을 위한 새로운 농업 정책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 정책 추진 경험도 언급했다.

김 예비후보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재직 당시 쌀값 인상과 농수산물 선물가 상승 상황 등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첨단산업 육성과 함께 농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가 중요하지만 농업과 수산업 역시 지역의 기반 산업”이라며 “농업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혁신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특별시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민주당, 검찰 조직 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직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박성준 의원(왼쪽 세 번째)과 특위 소속 의원들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희, 이진태, 박성준, 양부남 의원. 홍남

“AI 반도체 수도 육성”...트라이앵글 산업 벨트 구상

민형배,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 추진...산업 인프라 구축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사진)이 전남·광주를 AI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하는 ‘반도체 트라이앵글 산업벨트’ 구상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11일 광주 첨단국가산업단지 ‘국가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NAPC)’ 구축이 확정된 것을 계기로 전남·광주를 AI 반도체 패키징과 데이터센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NAPC는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2.5D·3D 첨단 패키징

기술을 실증하는 국가 연구개발 거점이다. 민 의원은 이 시설을 기반으로 메모리 크놀로지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3D 패키징 전공정 실증 체계를 구축하고, 약 5000억원 규모의 양산급 12인치 첨단 패키징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광주에는 반도체 연구개발과 첨단 패키징 산업을 집중 배치하고,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는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반도체 트라이앵글 산업벨트’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용 전



기를 100원 수준으로 공급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부산 기장·여수 산단·해남 솔라시도·광주를 연결하는 남부권 산업용광케이블을

구축해 반도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패키징, 반도체 생산이 결합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 전남광주는 세계적인 AI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남부권 신산업 중심지이자 글로벌 AI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재호, 민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불참

시민배심원제 배제...“통합에 맞지 않는 룰” 쓴소리

이재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 의원은 11일 성명을 내고 “통합 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호남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마련하며 머뭇거리지 않겠다. 저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춘다”며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경선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민주당이 후보 선출 과정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해 왔다.

그는 “전남광주 통합 선거구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경선 방법



을 당에 요청했지만, 당에서는 통합 지역에 걸맞지 않게 다른 지역과 동일한 경선 방식을 내놓았다”며 “아쉬움이 크지만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계속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현행 경선 방법의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원칙을 지켜온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불참으로 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직무정지), 민형배 의원, 신정훈 의원, 이병훈 민주당 호남특위 부위원장, 정준호 의원, 주철현 의원 등 7명이 경쟁하는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 친환경농자재 지원

‘저탄소 유기농 농업’ 확산

전남도가 올해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988억원(보조 860억원·자부담 128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50억원 증가한 규모다.

세부 사업별로 유기농업자재 지원 236억원, 토양개량제 공급 204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 203억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320억원, 저탄소농업 활성화(바이오-차) 지원 25억원 등이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법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유기농자재 등을 지원하며, 유기농인증 농가는 ha당 200만원, 무농약 농가는 150만원을 지원한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마늘, 들녘, 단위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157μm 미만)와 산성도양(pH 6.5 미만)을 개량하기 위해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 8만3000t을 공급한다. 특히 올해는 비개시비료 폐해가 발생한 농지에 우선 공급해 사전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 유기질비료와 가축분퇴비 44만4000t을 공급한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을 단지화해 공동방제 및 농자재 구입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의 경우 유기농인증 농가는 헥타르당 120만원, 무농약 농가는 헥타르당 50만원 지원한다.

저탄소농업 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은 원예·특용작물 농가에 탄소배출 감소와 토양환경 개선 등 효과가 있는 바이오차 구입비를 10a당 48만원 지원한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주철현 “목포 해상풍력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2030년까지 3000억 투입... 전남 신재생에너지 산업 거점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 목포 일원에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연계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공약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11일 “목포신항과 대불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상풍력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해 해상풍력 발전 설비와 연관 산업을 집중하고 관련 기업과 공장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상에 따르면 특화단지에는 해상풍력 하부구조 해상 조립시설을 비롯해 발전기와 터빈, 해저케이블 등 주요 기자재 생산 시설을 집중하고 설비 수리·유지보수 기업도 함께 유치한다. 또 해상풍력 발전소와 해저케이블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산업 기반도 동시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국비 등을 포함해 약 3000억원을 투입해 추진되며, 2027년까지 타당성 연구유역을 진



행해 구체적인 사업 방향과 추진 전략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전남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전국에서 가장 큰 지역”이라며 “해상풍력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은 그동안 강조해온 ‘신재생에너지 허브 전남’ 구상의 핵심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명창환 “여수,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 전환”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한 명창환 조국혁신당 예비후보(사진)가 여수국가산단 위 기극복과 미래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여수형 에너지 대전환’ 비전을 제시했다.

명 후보는 11일 “미래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은 에너지에서 결정된다”며 “여수를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로 재편해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수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 국가 산단을 보유한 산업도시이면서도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그러나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



려면 기업들이 RE100 등 재생에너지 기반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해 여수를 신재생에너지 선도 도시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명 후보는 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 재생에너지·수소 기반 산업 구조 전환 △ RE100 산업단지 단계적 구축 △ 에너지 연계 미래 신산업 유치 △ 에너지 정책 전담 조직 ‘에너지정책국’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